

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3275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3. 7. 3.
제출자 유매희 의원
김기남 의원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7월 3일 유매희 의원, 김기남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,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지원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라.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질환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시(市)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환경성질환 예방 및 악화방지를 위한 환경피해 인정자에 대한 지원 기간,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.
- 또한, 「환경오염피해구제법」 제34조에 의거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, 「경기도 환경보건조례」에 의거 역학조사 및 건강영향조사반 구성이

가능한 부분을 고려하여 안 제5조 지원 내용에 대한 상위법 중복 여부 및 본 조례안 제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.

※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(약칭: 환경오염피해구제법)

제23조(환경오염피해 구제) ① 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(이하 "피해자등"이라 한다)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(이하 "구제급여"라 한다)를 지급할 수 있다.

1.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
2.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

제34조(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) ① 피해자나 그 유족이 해당 환경오염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피해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「민법」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※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

제7조(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)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도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건강영향조사의 청원) ① 도민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제11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9조(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·운영) ① 도지사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반을 둔다.

② 건강영향조사반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건강영향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환경보건, 인체독성,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